

2019 주요 업무보고

2019. 11. 5.

재 무 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5팀 239명/232명 (정/현원)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자산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1,005,710	20,345,383	660,327	3.2
지방세수입	18,221,310	17,096,474	1,124,836	6.6
세외수입	640,701	608,085	32,616	5.4
보조금	1,789	1,823	△34	△1.9
보전수입등	2,141,910	2,639,001	△497,091	△18.8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525,119	2,453,833	71,286	2.9
사업비	29,867	119,651	△89,784	△75.0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6,302	5,280	1,022	19.4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3,388	94,973	△91,585	△96.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0	97	△7	△7.2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936	1,953	△17	△0.9
시세입 목표달성	10,555	9,727	828	8.5
조세정의 실현	7,596	7,621	△25	△0.3
타 기관 지원	1,758,327	1,621,544	136,783	8.4
자치구 교부금(재정보전금)	1,331,649	1,197,593	134,056	11.2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424,431	419,907	4,524	1.1
출연금	2,247	4,044	△1,797	△44.4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734,935	710,652	24,283	3.4
기본경비	1,990	1,986	4	0.2

재산현황(市)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57,809	104,477 (100.0%)	58,783	10,269 (100.0%)
행정재산	55,647	103,102 (98.7%)	4,110	5,090 (49.6%)
일반재산	2,162	1,375 (1.3%)	54,673	5,179 (50.4%)

II.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효율적인 재무행정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정책
과
제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실
천
과
제

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 추진
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3. 2020년 개인지방세 자치구 신고 이행
4. 효율적 지출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

1.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 추진
2.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 제공
3. 장애인 등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시책 개선

1. 설계의 품질 향상과 시설물 안전성 강화
2. 적정하고 공정한 계약심사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3. 계약정보 통합·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1. 주요재산 적극 취득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2.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
3.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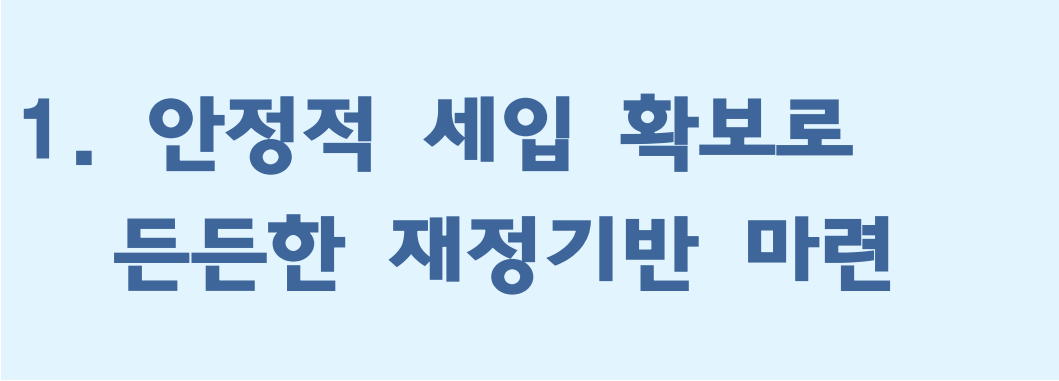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 추진

1-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1-3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이행

1-4 효율적 지출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 추진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 장기화, 대외 수출여건 악화 등 하반기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 징수활동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19년 시세 징수 목표 : 18조 2,213억원

- 전년(17조 965억원) 대비 1조 1,248억원(6.6%) 증가

□ 시세 징수 실적('19. 8월 기준)

- 징수 13조 1,703억원으로 예산(18조 2,213억원) 대비 72.3%
 - 전년 동기 징수액 (12조 9,140억원) 대비 2,563억원(2.0%) 증가

【주요 세목별 8월 시세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 예산액(A)	2019.8월			전년동기 징수액(C)	전년대비	
		당월징수	누계징수(B)	진도율(B/A)		증감액(B-C)	비율(B/C)
계	182,213	15,998	131,703	72.3	129,140	2,563	102.0
취 득 세	42,738	4,930	33,294	77.9	34,922	-1,628	95.3
지방소득세	52,386	3,113	46,693	89.1	45,528	1,165	102.6
지방소비세	17,946	4,920	14,935	83.2	10,897	4,038	137.1
재산세 등	69,143	3,035	36,781	53.2	37,793	-1,012	97.3

□ 추진실적

- 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대책회의 개최 및 자치구 순회점검
 - 행정1부시장 주재, 區 재무국장 참석 세입징수대책회의 개최(4월,9월)
 - 세입징수 독려를 위해 25개 자치구 방문을 통한 순회 점검(상반기)
-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언론 보도 및 납부편의 시책 확대 운영
 - 자동차세(6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정기분 세목 언론 홍보(4회)
 - 간편결제(삼성, 네이버), 모바일앱 고지(페이코, 네이버 등) 등 납부서비스 확대
- 누락·탈루세원 발굴 위한 법인 세무조사(21개) 및 자치구 지도점검(14개)

□ 향후계획

- 하반기 자치구(25개) 세무부서 징수활동 지도점검 : '19. 11월
- 자동차세 정기분(12월) 납부홍보 강화 : '19. 12월

1-2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효율적인 체납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시세 징수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19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 : 2,216억원

- '19. 8월말 현재 징수실적 1,781억원, 진도율 80.4%
 - 전년 동기 징수액 (1,651억원) 대비 130억원, 진도율 7.9% 증가

□ 추진실적

-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대책 강구 추진
 - 우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한 「납세담보」 제도 확대추진(35명, 75억원)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10명, 2억원)
- 호화생활자, 사회저명인사 등 특별관리
 - 재산은닉 및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306명, 288억원)
- 시·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 및 체납징수협력 강화
 - 시·자치구 합동 체납징수 우수사례 및 대책회의 개최('19. 6월, 10월)
-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시·자치구·경찰청 합동단속
 - 시·자치구 경찰청 합동단속 : 한남대교 남단(5.22), 경부고속도로 서초C갓길(9.24)
 - 자치구 및 경찰청 자체 관내 이동 단속 : 서울시 전역(5.22, 9.24)
 - ▶ '19년 실적 : 번호판영치 915대, 체납징수 124백만원, 견인 11대

□ 향후계획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 지속 실시 : 연중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 '19. 11월
- 은닉재산 제보센터 전담창구 지속 운영 : 연중

'20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에 대비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현행 세무서 접수에서 '20년부터 자치구 접수로 변경
 -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약 160만명('19년 예산액 7,054억원)
 - 신고대상 160만명 중 약 24만명(15%)은 세무서 및 자치구 방문신고 예상
 - ※ 세무서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 자치구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 추진실적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대비 예행연습 실시('19. 5월)
 - 5월 한 달 동안 관내 세무서(28개)에서 세무서 직원과 자치구 직원 합동근무
- 예행연습에 참여한 직원을 중심으로 시·구 합동 T/F 구성('19. 8월)
 - T/F는 2개 반 10명으로 구성·운영(시 4명, 자치구 6명), 총 3회 개최
 - ▶ 1반(5명) : 자치구 신고센터 설치 계획 수립 / 2반(5명) : 신고·납부 매뉴얼 제작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준비를 위한 시·구 예산 반영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관련 예산 총 983,421천원 편성
 - ▶ 서울시 : 61,560천원(모두채움신고서 제작 비용)
 - ▶ 자치구 : 921,861천원(모두채움신고서 발송 516,141천원, 신고센터 설치 405,720천원)

□ 향후계획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예산 편성 : ~ '19.12월
- 개인지방소득세 운영매뉴얼 및 상담사례집 발간 : ~ '19.12월

1-4 효율적 지출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

금고 환경 변화, 지방채 발행 등을 고려한 자금관리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안정적인 자금수급과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함

□ '19년 적용금리('19.10.15기준 COFIX 금리 : 1.57%)

- 정기예금 : COFIX 금리+가산금리
 - 1개월(-0.11%), 3개월(+0.08%), 6개월(+0.35%), 12개월(+0.55%)
- 공금예금 : 1.52%(고정)

※ '19년 자금운용 현황(9월말 현재)

- ▶ 자금규모 : 평잔 3조 1,052억원, 공금예금 잔고 3,573억원
- ▶ 이자수입액 : 439억원(일반회계 342억원, 특별회계 97억원)

□ 추진실적

- '19년 자금수지 전망 분석 및 자금관리 운용 계획 수립('19.2월)
 - 지방소비세 세율(4%p) 인상,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은 예상되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취득세 등 세입의 불확실성은 내재
 - 유동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둔 중·단기 예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운영
 - 월별 자금수지 현황을 분석하여 일평균 잔고 최소화 목표관리제 시행
- 정기예금 예치율 최소 85% 이상 확대 운용('19.9월말 88.5%)
 - 정기예금 목표 예치율 확대 운용으로 이자수입 제고('18년 80% ⇒ '19년 85%이상)
- '19년 지방채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기하여 재정부담 최소화
 - 회계간 전용 등 가용자금 선 지출로 지방채 발행시기 최대한 연기, 부족재원 발생시 지방채 발행하여 이자부담 최소화(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의)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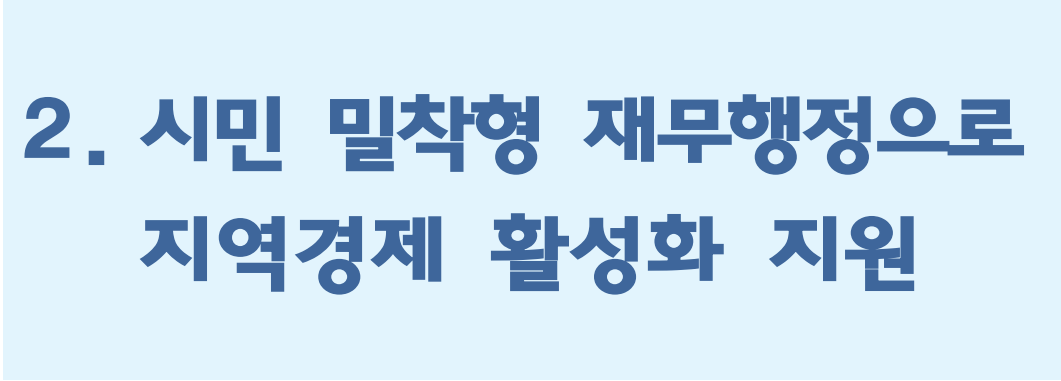

- 월별 자금수지 현황분석 및 고액지출계획 수합·관리 : 분기별

세무 분야 예산집행현황(총괄)

(단위 : 천원, %, '19.9.30 기준)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 액	집행률	금 액	집행률
합 계		1,778,389,448	878,400,426	49.4	1,777,270,398	99.9
세 제 과		1,335,807,385	508,355,689	38.1	1,335,807,385	100.0
재정보전금	- 25개 자치구 대상, 재정보전금 교부를 통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	1,331,648,979	504,218,732	37.9	1,331,648,979	100.0
한국 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2,247,130	2,247,130	100.0	2,247,130	100.0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 : 판사 등 25명	112,300	90,851	80.9	112,300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 연구과제 발표·토론을 통한 지방세제 개선사항 도출 및 법령 개정안 마련	10,000	10,000	100.0	10,000	100.0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업무지원과 국고조보금 실태점검 등 업무추진	1,788,976	1,788,976	100.0	1,788,976	100.0
세 무 과		434,986,017	365,162,426	83.9	433,866,967	99.7
시세징수교부금	-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액의 3%를 지급하는 법정경비	424,431,388	357,430,095	84.2	424,431,388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한국화훼납세조합 등 17개 조합)에 대한 법정 징수교부금 지급 (납입세액의 2%)	546,930	156,383	28.6	243,383	44.5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통합인쇄 및 봉투제작	800,909	590,588	73.7	688,561	86.0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 수수료 지급 및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울시분담금 지급 - 납세편의서비스 : 카드이용납부, 문자안내, 편의점 납부 등	178,562	38,369	21.5	161,452	90.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 자치구 교육 교재 발간비, 과징지도 활동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세입확보 유공 시상금 등	193,000	169,711	87.9	190,103	98.5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 ETAX 전자납부 마일리지 지급	542,760	453,455	83.5	542,760	1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30,000	30,000	100.0	30,000	100.0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 액	집행률	금 액	집행률
시세 세원발굴 지원	- 민간인 및 공무원의 탈루·누락세원 발굴관련 포상금 집행 - 분기별 자치구 시세 세원발굴 포상금 재배정	130,000	48,056	37.0	130,000	100.0
시 세입증대 자치구협력 및 지원사업	- 자치구에 위임되어 징수되고 있는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입 징수실적 등을 최대화하여 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5,000,000	5,000,000	100.0	5,0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세무종합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 지방세 부과·징수처리 및 운영 지원 -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1,602,406	793,078	49.5	1,595,100	99.5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23,109	21,600	93.5	21,600	93.5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 서울시 지방세정보화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분석 - 서울시 지방세정보화 발전방안 구축전략 및 개선모델 마련	664,088	0	0.0	0	0.0
세외수입종합징 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842,865	431,091	51.1	832,620	98.8
38세금징수과		7,596,046	4,882,311	64.3	7,596,046	100.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체납시세 징수에 따른 시·자치구 징수공무원 포상금 집행	2,222,482	1,278,482	57.5	2,222,482	100.0
자동차세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따른 대행사업비(분기별 지급)	5,083,954	3,407,606	67.0	5,083,954	10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 체납징수 협력체계 구축·강화와 징수공무원의 사기 고취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11,000	11,000	100.0	11,0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 고액체납징수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위한 우편료 및 차량운영비 등 지급	278,610	185,223	66.5	278,610	100.0



2.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1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 추진

2-2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 추진

2-3 장애인 등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시책 개선

2-1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 추진

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우수업체 홍보 및 맞춤형 계약실무교육으로 지역업체 역량 강화
- 수의계약 활용 및 경쟁계약 가산점 개편으로 지역업체 공공사업 수주 확대

□ 추진실적

- <서울계약마당>에 지역업체 제품 정보 홍보 강화 ('18.9월 이후)
 - 자치구별 2만 9천여 개 지역업체 제품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개
 - 소관부서에서 추천한 우수기업 제품 카탈로그 등 게시하여 홍보
-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 지역업체 우선 선정 협조요청 ('18.9월, '19.1월)
 - 2천만원 이하 사업은 해당 지역업체와 우선 수의계약토록 자치구 협조요청
 - ▶ 정책 시행 전후 자치구 전체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 비중 증가 : 26.8%('17.9월~'18.8월) ⇒ 36.5%('18.9월~'19.9월)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계약실무교육 실시 ('18.11월, '19.5월)
 - 공공시장 진입 경험 적은 신생업체 직원 참석 (1차 42명, 2차 70명)
 - ▶ 교육참석자의 85.4%가 만족, 지속적 교육 요구 79.6% 등 업체 긍정 평가
- 일반용역 경쟁입찰 적격심사 가산점 개정 ('19.9월 개정, 11월 시행)
 - 도시재생 등 지역기반 사업 추진시 해당 자치구 소재 업체 가점 2.0점 신설
 - 일반기업이 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입찰시 가점 2.0점 신설
 - 사회적 경제기업 가점 1.5점 ⇒ 2.0점 확대

□ 향후계획

- 지역업체 하반기 계약실무교육 실시 : '19.11월 중

2-2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 추진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우수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 등 서민 경제활동 지원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무상담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를 마을(동)과 연결하여 지역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 활동인원 : 358개동 331명 *임기 2년('18~'19)



□ 추진경과

-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한 지자체 최초 민관세정협력사업 시행('15.1월)
- 서울시 사례 전국으로 확산('16.6월 행안부)
- 규모확대 : 143명('15년)→ 213명('16년)→246명('17년) →331명('18년)
- 상담실적 : '19년 9월까지 5년간 총 17,187건

□ 추진내용

- 마을세무사 내실화를 위한 자치구 단위 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 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회장 25명 위촉완료(지역별 민관 협력활동) : '19. 5. 7.
- 마을세무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활동 마을세무사 인센티브 지원
 - 신한은행과 협약하여 금리우대 및 बैं킹수수료 면제, FC서울 축구관람권 지원
-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운영
 - '찾아가는 서울시청' 참여('19년 45명 참여, 174명 상담)
 - 복지관 등 현장상담 서비스 연내 총 7회 추진(5회 84명 상담, '19년 9월 기준)
-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1동 1마을세무사 추진(제4기) : '19. 12월중
 - 현재 331명에서 93명 증원하여 1동 1마을세무사 서비스 지원(총 424명)

우수 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추진방향

- 희망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 희망기업을 발굴·홍보하여 판로 확대 및 지원 강화

추진내용

-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목표부여 및 실적관리 강화
 - 목표 : '18년 1조 5,009억원 → '19년 1조 5,739억원(4.9%↑)
- '19년 희망기업제품 기관별 구매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19년 상반기 우수기관 : 은평병원, 서울시립대, 관광체육국, 물순환안전국, 서울역사박물관
 - 연말 우수기관 「희망구매 실천상」 시상 및 기관별 성과평가 반영(연 2회)
- 「희망기업제품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우수기업 홍보 및 경쟁력 향상도모 (11월)
 - 우수 희망기업은 서울계약마당 등에 홍보, 하위기업은 품질 개선 유도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속 지원

추진개요

-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희생지원을 위해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 체납처분 및 체납액 징수유예, 실익 없는 장기압류 채권 등 압류해제

추진 실적('19.10월 현재)

-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희생 지원
 -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등(6,673명, 체납액 761억원)
- 소액예금,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등 압류 해제
 - 150만원 미만 금융재산 및 실익없는 장기 압류채권 해제(20,320명, 1,961억원)
 - 11년 이상 승용·12년 이상 화물 자동차 등 압류해제(97,177명, 1,026억원)

2-3 장애인 등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시책 개선

기존 납세편의 시책은 일반인 및 내국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납세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서비스 개발

□ 「장애인 및 어르신 특화 무인납부기」 설치

- 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및 어르신이 쉽게 지방세 납부 가능토록 지원
 - 시·구청 및 일평균 이용인원 1천명 이상 복지시설(10개) 등에 36대 설치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토록 지원
-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및 설계·개발 완료
 - 저시력, 색각, 휠체어 이용자, 점자안내 등 필수적 기능 분석·시스템 반영
- 설치장소 선정, 무인납부기 시범 운영 및 순차적 설치시행(11월)
 - 구청(1) 및 복지시설(1)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후 전체 기관 설치 운영

□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한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 도입

- 스마트폰 ARS로 지방세 납부 시 화면서비스 제공시스템 개발완료
 - 기존 ARS 납부 시 음성에만 의존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이용 불편 발생
 - ARS 납부에 음성서비스와 추가로 화면서비스를 개발하여 납부 편의 지원
 - 사용이 편리한 화면구성, 화면 간 이동 최소화 기능 등 이용편의 반영
- 서버 및 인프라 구축완료, 사용자 테스트 및 시행(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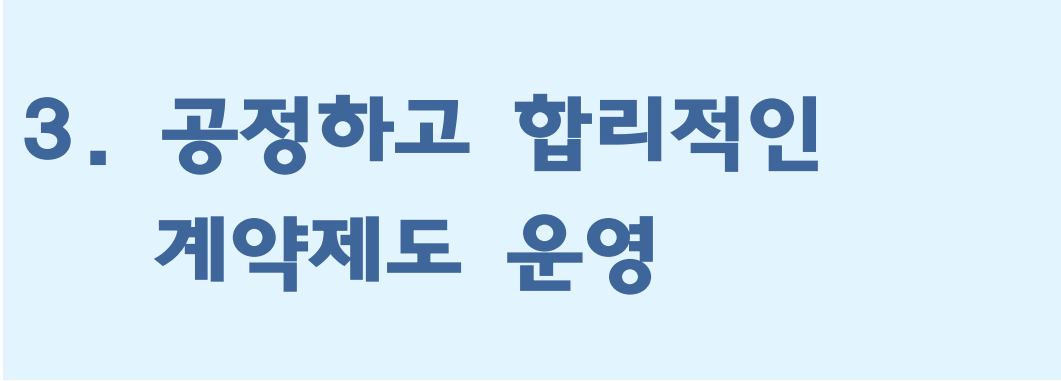

□ ETAX 및 STAX 「다국어 납부 서비스」 확대

- 다문화 가정, 거주 외국인 등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12월)
 - ETAX : (현재)한국어, 영어 → (확대) 중국어, 베트남어 추가
 - STAX : (현재) 한국어 → (확대) 영어 추가


재무행정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9.9.30 기준)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 액	집행률	금 액	집행률
합 계		741,017,669	537,036,090	72.5	717,378,660	96.8
재 무 과		740,992,939	537,032,090	72.5	717,353,930	96.8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공동 행정물품 보급지원 및 반납물품, 재활용 등 자재창 고 운영 - 노후물품 및 복합기, 프린터 구매지원 등	1,053,718	882,561	83.8	1,050,287	99.7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서울시 통합 결산서 작성 및 수검(1~5월) - 시의회 결산승인(6월) - 알기쉬운 재무정보 제작(7월) - 재정연감 등 결산통계 작성 (8~10월)	232,015	190,211	82.0	210,457	90.7
지방재정관리시스 템 운영	- e호조 시스템 자치단체별 분 담금 지급	40,053	40,053	100.0	40,053	100.0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 온라인으로 수입증지를 구매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36,507	0	0.0	0	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	4,395,151	1,587,626	36.1	2,527,608	57.5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 본청 및 사업소 일반회계 소 속 인건비 통합편성	734,935,495	534,331,639	72.7	713,525,525	97.1
세 제 과		24,730	4,000	16.2	24,730	100.0
마을세무사 운영	-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서비 스 제공	24,730	4,000	16.2	24,730	100.0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3-1 설계의 품질 향상과 시설물 안전성 강화

3-2 적정하고 공정한 계약심사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3-3 계약정보 통합·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3-1 설계의 품질 향상과 시설물 안전성 강화

설계 경제성 심사 강화, 서울형품셈 정비·개발, 전기 내진설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설계의 품질향상과 시설물 안전성 제고

□ 추진실적

- 설계 경제성 심사(설계VE) 강화로 설계의 품질 향상('19.1.1~현재)
 -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완료 前 시설물 안전·편의성 등 검토 강화
 - ▶ '19.9월말 기준 30건 3조 6,064원 심사, 730억원 절감, 설계대안 1,650건 발굴
 - 설계VE 위원 170명 중 임기 만료된 82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및 재위촉('19.5월)
 - ▶ 경제성 향상 및 기능·품질 향상을 위한 대안 발굴, 시설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검토 수행
-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민·관 협업 방식으로 「서울형품셈」 정비·개발
 - 민·관 TF(건설관련 협회·발주부서 등) 합동 현장실사 25회 실시('18.12월~'19.10월)
 - 강관구멍뚫기 등 보완대상 품셈 3개 정비완료(6월), 3개 품셈은 11월 정비완료 예정
 - 내진스토퍼 등 3개 신규품셈 개발완료(8~10월), 5개 품셈은 12월 개발완료 예정
- 공공건축 안전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기설비 내진기준' 마련
 - 지진발생 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품셈 등 개발계획 수립('19.6월)
 - 공사협회·조명협회 등 민·관 TF 합동 현장조사, 내진기준 개발, 연구·자문 등 실시('19.7~8월)
 - 전기내진 품셈 개발(2건) 및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요령' 마련·교육('19.8.31.)

□ 향후계획

- 서울형품셈 정비(3개) 및 신규개발 추진(5개) : ~ '19.12월
- 전기내진 개발 품셈 2개 정부 표준품셈 등록 추진 : '20.1월
 - ※ 내진스토퍼 설치품, 케이블트레이 내진 버팀대 설치품 2개 품셈

3-2 **적정하고 공정한 계약심사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우리 시 재정건전화 및 신속한 사업발주에 기여

□ **추진실적**

○ **적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및 심사기간 단축**

- '19.9월말 기준 3,018건 2조 5,440억원 심사, 1,251억원 원가 절감
 - ▶ 공사 1,352건, 용역 294건, 구매 1,171건, 민간위탁 201건
- 평균심사기간은 4.6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법정 처리기간 10일 대비 5.4일 단축
- 심사조정내역을 발주부서에 사전 설명, 원가심사 내역 공개로 투명성 강화

○ **축적된 계약심사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추진**

- 갈현1구역 재개발(5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9월) 2개 조합 자문 완료
 - ▶ 2개 조합 총 1조 2,729억원 심사 444억원 절감(절감률 3.48%), 설계대안 104건 발굴
- 39개 조합 대상 홍보우편 발송(3월), 6개 조합 대상 방문설명(4~5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원가자문 확대 실시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 강화 및 운영 개선('19.5.16.)
 - ▶ (기존)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변경)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 분	변경 전 (규칙)	변경 후 (조례)
위원회 운영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명, 내부위원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명, 내·외부 위원 구성 ○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 필요 시 현장실사 ○ 회의록 의결서 등 비치

- 조례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제정('19.10.10.)
-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규정 삭제 등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19.10.10.)

□ **향후계획**

- 사업시행인가 예정조합 진행사항 파악 및 원가자문 지속 홍보 : 연중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요령 마련·시행 : '19.11월

3-3 계약정보 통합·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온라인을 통해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효율성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1. ~ '19.12.

○ 사업내용

- 법·제도·규정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계약정보 공개
- 계약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희망기업 제품 활성화 체계 정립



□ 추진 실적

○ 서울시 모든 계약정보 통합·공개

- 분산된 계약정보(행안부, 조달청 등)를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의 발주(계획), 계약과정, 대금지급 등 공개

○ 계약업체 이력관리

- 계약실적, 납품내역, 건설공사, 제품정보 등 업체별 계약관련 통합관리
-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이력을 제공 받아 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공개

○ 인터넷 실적증명 발급·신청 서비스 확대 실시

- 기존 4종(전기공사, 시설공사, 용역, 물품)에서 4종(소방, 통신, 건설, 폐기물) 추가(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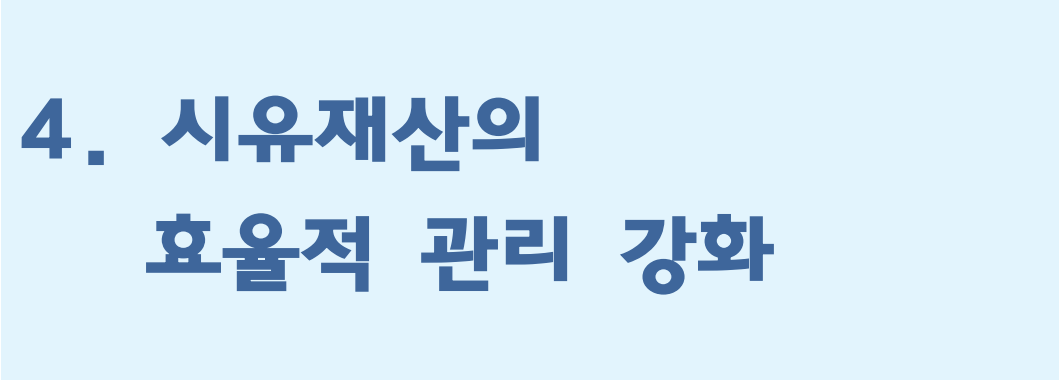

○ 서울계약마당 모바일 웹 서비스 운영(10월)

-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정보 등 검색 가능

계약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9.9.30 기준)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 액	집행률	금 액	집행률
합 계		333,957	203,470	60.9	290,067	86.9
재 무 과		244,087	130,220	53.3	203,390	83.3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등 심의 - 위원회 구성 : 변호사 등 13명	20,484	15,300	74.7	20,000	97.6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 나라장터 입찰공고 수수료 납부	116,190	73,010	62.8	99,570	85.7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 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 상용 SW라이선스 구매·설치	107,413	41,910	39.0	83,820	78.0
계약심사과		89,870	73,250	81.5	86,677	96.4
계약심사 업무추진	-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 원가분석자문회의 실시	54,000	46,250	85.6	52,600	97.4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 설계VE 특별교육과정 실시 - 설계VE담당 공동연수 실시	35,870	27,000	75.3	34,077	95.0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4-1 주요재산 적극 취득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


4-3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4-1 주요재산 적극 취득 및 활용도 제고

우리시 필요재산을 시 소유로 적극 확보하고,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행정수요 적기 대비 및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추진실적

- 舊 북부지검·지법, 잠실운동장 부지 등 주요 시책사업 요충지 적극 취득
 - 舊 북부지검·지법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 완료('19.9)
 - 소송이 진행 중인 잠실운동장 부지는 市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업하여 적극 대응
- 市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건물 지속 발굴 및 전략적 매입 검토
 - 장래 행정수요 대비 市 취득 필요 재산 발굴(34건) 및 사업부서 자료 제공
 - ▶ 사업부서의 재산수요와 공급을 연계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추진 도모
 - 매입 관련 사전절차 안내 등 재산 매입 과정 지원
 - ▶ 재산매입 전 과정에 걸쳐 자문 및 핵심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필요한 부동산 자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여유 부족, 양질의 부동산 매입 어려움 ■ (사업부서) 매입시기,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 부동산 동향파악 및 매입가능 부동산 목록 관리·제공 ■ (재무국) 매입 관련 사전절차 상시 안내 등 매입과정 지원 수행

-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및 소요조회로 공간 수요 적기 대응 및 활용도 제고
 - 일정규모 이상 주요 시유건물 활용 실태 현장점검 추진 중('19.5~)
 - ▶ '19.9월말 현재 시유건물 14개소 점검 완료
 - 발굴된 가용재산은 소요조회를 통해 필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 향후계획

-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입 : '20년 초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의결('19.11~12), 매매계약 체결('20년 초)
- 잠실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한 소송 대응 및 기관 협의 : 연중
-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및 소요조회 실시 : ~'19.12월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매각 대상 재산은 적기 매각하는 등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 도모

□ 추진실적

- 정확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 추진
 - 부동산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계약 체결('19.5), 중간보고회 실시('19.10)
 - '19.9월말 현재 도로 200필지, 미등재 토지 및 건물 200호 조사 완료
-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 마련으로 시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
 - 보존부적합 시유지 등 공개매각 7회 추진('19.2~9월) : 11건, 4,080백만원 낙찰
 -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지구 내 시유지 적기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와 적극적·선제적 업무협약
-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 활용계획 변경(주택공급 부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공유재산심의회('19.5)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19.6)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019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19.4), 상반기 실적 점검('19.9)
 - ▶ 체납 정리 실적('19.9월 기준) : 목표액(32억원) 대비 104.6% 달성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향후계획

- '19년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 추진 : ~ '19.12월
 - 실태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실시(~11월), 조사결과 정리 및 DB구축(~12월)
- 보존부적합 시유지 등 공개매각 지속 추진 : 연중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후속절차 이행 : ~ '19.12월
 -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역발전본부, '19.12) 및 변경된 계획에 따른 지적정리(재무국)

4-3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집단화를 통해 효율적 재산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비용 절감, 재산가치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 추진 절차



○ 그간의 추진성과('16~'18)

- 관악영어마을, 문화비축기지, 서울혁신파크 등 12개소 사업 완료
- 필지 수 456건 감소, 면적 4,874㎡ 증가, 공시지가 7,182억원 증가로 시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추진실적

○ 추진 대상(총 6개소)

- 손기정체육공원, 서울과학고, 충정녹지대, 초안산근린공원, 중랑캠핑숲, 경춘제2녹지

○ 주요 추진사항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국토부, 자치구, 국토정보공사 등) 협의('19.3~5월)
- 「2019년 주요재산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수립('19.6월)
- 손기정체육공원, 서울과학고, 충정녹지대 등 3개소 집단화사업 완료('19.9월)
- 중랑캠핑숲 외 2개소 재산교환 및 회계이관 추진 중('19.6월~)

□ 향후계획

○ 매입·교환 및 확정측량 등 집단화 추진 : ~ '19.11월

○ 시유지 집단화 완료에 따른 공부 정리 : '19.11~12월

- 지적공부·건축물 정리 및 토지·건물 등기신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재산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9.9.30 기준)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 액	집행률	금 액	집행률
합 계		3,388,280	1,934,745	57.1	3,312,203	97.8
자산관리과		3,388,280	1,934,745	57.1	3,312,203	97.8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 시유재산 안전점검 및 수선 - 시유재산 집단화 사업 재산 교환 차액 등 지급	700,000	484,257	69.2	700,000	10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시유재산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 - 재산 교환·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 시유지 집단화 사업추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617,437	1,416,038	54.1	2,543,303	97.2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추진	70,843	34,450	48.6	68,900	97.3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전망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19.8.31 기준)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진도율 (C/A*100)	비 고
계	21,005,710	16,524,625	15,462,809	73.6	
지방세 수입	18,221,310	14,220,968	13,170,251	72.3	
세외수입	640,701	159,958	148,859	23.2	
보조금	1,789	1,789	1,789	100.0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2,141,910	2,141,910	2,141,910	100.0	순세계잉여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19.9.30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합 계	2,525,118,930	1,417,574,731	56.1	2,500,240,904	99.0
사업예산(계)	1,788,193,859	883,243,092	49.4	1,784,725,803	99.8
재무과	6,301,531	2,830,671	44.9	4,031,795	67.7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053,718	882,561	83.8	1,050,287	99.7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2,015	190,211	82.0	210,457	90.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3	40,053	100.0	40,053	100.0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336,507	0	0.0	0	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4,395,151	1,587,626	36.1	2,527,608	57.5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484	15,300	74.7	20,000	97.6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16,190	73,010	62.8	99,570	85.7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07,413	41,910	39.0	83,820	78.0
자산관리과	3,388,280	1,934,745	57.1	3,312,203	97.8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700,000	484,257	69.2	700,000	10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617,437	1,416,038	54.1	2,543,303	97.2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0,843	34,450	48.6	68,900	97.3
계약심사과	89,870	73,250	81.5	86,677	96.4
계약심사 업무추진	54,000	46,250	85.6	52,600	97.4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27,000	75.3	34,077	95.0

구 분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 액	집행률	금 액	집행률
세 제 과	1,335,832,115	508,359,689	38.1	1,335,832,115	100.0
재정보전금	1,331,648,979	504,218,732	37.9	1,331,648,979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247,130	2,247,130	100.0	2,247,130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2,300	90,851	80.9	112,300	100.0
마을세무사 운영	24,730	4,000	16.2	24,730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000	10,000	100.0	10,000	100.0
개별주택가격 공지시원	1,788,976	1,788,976	100.0	1,788,976	100.0
세 무 과	434,986,017	365,162,426	83.9	433,866,967	99.7
시세징수교부금	424,431,388	357,430,095	84.2	424,431,388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46,930	156,383	28.6	243,383	44.5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00,909	590,588	73.7	688,561	86.0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78,562	38,369	21.5	161,452	90.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3,000	169,711	87.9	190,103	98.5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542,760	453,455	83.5	542,760	1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30,000	100.0	30,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48,056	37.0	130,000	10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100.0	5,0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602,406	793,078	49.5	1,595,100	99.5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23,109	21,600	93.5	21,600	93.5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664,088	0	0.0	0	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42,865	431,091	51.1	832,620	98.8
38세금징수과	7,596,046	4,882,311	64.3	7,596,046	100.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2,482	1,278,482	57.5	2,222,482	100.0
자동채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083,954	3,407,606	67.0	5,083,954	10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사·구 합동워크숍	11,000	11,000	100.0	11,0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78,610	185,223	66.5	278,610	100.0
행정운영경비(계)	736,925,071	534,331,639	72.5	715,515,101	97.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34,935,495	534,331,639	72.7	713,525,525	97.1
기본경비	1,989,576	1,527,000	76.7	1,989,576	100.0

V.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5	39	6	-	-
	시정· 처리요구사항	34	29	5	-	-
	건의 사항	3	2	1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받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임. 행정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음. 죄송하다는 표현보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임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과오납의 주요 원인은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결과 발생하는 환급액이 평균 90% 이상 대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타시도에 비해 과세건수 및 세액이 많고, 특히 대도시내 중과세, 비과세·감면 적용 등 부과 시점부터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수한 사례가 많아 불복청구가 많음 ○ '19년 교육을 통한 과오납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환급발생 세목인 지방소득세 자체교육 6회 실시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 전 법령 개정 내용, 과세대장 정비 및 전산 활용 등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향상 세목별 실시 - 지방세 환급사유 적정입력 요령 자치구 안내('19.3.29) ○ '19 상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19.4) ○ 자치구 시세입 평가 시 「과오납 줄이기」 지표 신설하여 환급 사유의 부정확 입력 및 착오과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구제제도 활성화, 소송 등 적극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지방세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전문가 자문 등 피드백 강화 등 노력 지속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6년 대비 2018년 8월까지 과오납이 3배가량 늘어났음. 과오납이 일어나지 않는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과오납 증가사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과세담당자가 환급세액을 과오납금으로 착오 입력 및 소송 등의 패소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 * 지방세 환급금에는 행정기관 착오나 불복청구에 따른 과오납금과 개별세법에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이나 납세자 착오에 따른 환급세액으로 구분 ○ 과오납 감소 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세입분야 평가시 환급금 관리실태 항목 중 감액사유 입력코드 적정유무 및 과오납 줄이기를 평가항목으로 추가 신설하여 자치구 환급업무 오류에 대해 구청의 책임성 강화 - 과세관청 착오와 납세자 착오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사유 적정입력 요령 자치구 안내('19.3.29) - 과세자료 정확한 정비, 법령개정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과세 방지 및 불복 청구 시 승소방안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금 유형별 분석결과 대부분 불복청구 패소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바, 불복 제기시 市·區간 공동 대응과 보조참가 등을 확대하여 불복청구에 적극 대응 추진 ○ 과오납 사유분석을 통한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담당 직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 적극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교육제도 개선하였으나 변화된 것이 없음. 교육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지 횡수만 늘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과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교육은 담당 세목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령 관련 직무교육과 전산 교육으로 세목별 부과 시기에 따른 사전 교육이 대부분임. ○ 잦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전산 수정 안내, 지방세 관련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판결 사항 등을 교육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어 반드시 많은 교육이 필요함.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 세목별 신고 및 납부시기, 정기분 부과에 따른 직무 전문교육을 총 21회 실시하여 지방세 과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올해는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을 대비하여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및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교육위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 신규자 및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 위주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방세연구원의 해외 비교 연수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비교연수사업은 외국 지방세 제도·사례연구 및 조사를 통해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세제연구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중임 ○ 연구원에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해외비교연수 운영방안 개선을 요청('18.12.04.)한 결과, 연구원 운영방안 변경 - 2019년부터 연수비용은 참여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 협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p>○ 지방세연구원의 해외비교연수 지원액이 권익위에서 금지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 되지 않는지와 서울시 여비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전수조사해 보고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16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해외연수제도는 사회 상규 상 허용범주에 해당하는 기준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 연수비용은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19년 부터는 연수비용을 참여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하여 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 협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내역과 의회에 미보고 사항 지적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지급시기 : '18.4.10 (사용액 약 480백만원) ○ 지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청에서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 시, 귀속비율을 일반매각에 준하는 20~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미지급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 -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판결금, 이자액을 선 집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판결('18.2.21.) : 일부 패소(13%패소, 87%승소) ○ '18.11.21. 제 284회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 대법원 판결 확정('19.6.13.) : 상고기각, 2심판결(항소기각) 유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비비 집행시 예비비 지출승인조례에 의거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체없이 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하는 예산 과목으로 미리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지급시기 : '18.4.10 (사용액 약 480백만원) ○ 지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청에서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 시, 귀속비율을 일반매각에 준하는 20~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미지급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 -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판결금, 이자액을 선 집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판결('18.2.21.) : 일부 패소(13%패소, 87%승소) ○ '18.11.21. 제 284회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 대법원 판결 확정('19.6.13.) : 상고기각, 2심판결(항소기각) 유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비비 집행시 예비비 지출승인조례에 의거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체없이 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겠음
<p>○ 시금고 대출수수료 수입 등 수수료 부담에 대한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 반영기준을 기초실과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대출수수료는 시금고에 귀속되므로 서울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음 ○ 다만,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금고에 협조 요청하는 등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법률적인 검토가 면밀히 되지 않는 행정이 재무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시정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기대각한 체비지의 최종 소유자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방식(화해권고)으로 등기이전을 추진해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권고사항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정판결로 판결문상 패소가 아닌 화해권고결정임 ○ 또한, 세무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소송 담당 직원 보강(2명) 및 추가 채용 예정
<p>○ 상품권 지급 관련 임금성격의 지급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서별로 구입내역을 공개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15.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 2018년 구매 및 지급내역 공개(19. 2월)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 - 공개내용 : 구매일시, 종류, 수량, 금액, 용도, 지급대상
<p>○ 평잔액 등 자금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며 유휴자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자금관리 운용 계획 수립 : '19.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적용금리를 감안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정기예금 예치율 85%(전년목표 대비 5% 상향) 이상 확대 운용으로 이자수입 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빈집활용 및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16.9월)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를 통한 '출자 동의안' 의회 의결은 적법한 추진 절차로 판단됨 ○ 다만 '출자 동의안'을 통한 지방의회 의결 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16.9월)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출자 동의안' 의결을 받을 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출자 동의안'을 받도록 안내 하겠음 - 시 전부서 공문발송, 시업무공지 게시, 시·구 공유재산 담당자 집합교육 등을 통해 홍보·교육 실시
<p>○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시민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금고 선정 : '18. 5월 -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지방세 납부 편의성 등 시민의 이용편의성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 ○ 차기 시금고 선정시 시민편의성과 안정성이 비중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생기는 세입 결손 관련 재무국과 기초실의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재무국은 항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말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이행으로 서울의료원 주변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시장상황 형성이 전망되는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의료원 부지를 MICE지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년 매각수입 예산을 편성한 것임 ○ 유관부서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적정매각시기를 결정하고 서울의료원 매각 세입 관련 기초실과 적극 협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p>○ 시금고 은행 변경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기존시스템을 공유하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월부터 시금고 은행이 변경됨에 따라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수납시스템을 이전·구축하였음 ○ 앞으로 시금고 변경에도 구축된 전산 수납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영역(수납/자금 집계정산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서울시 소유로 하였으며, ○ 서울시 소유 건물인 상암동 소재 에스플렉스센터 건물 내 전산시스템을 입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플렉스센터 내 설치 전산실에 대해 세무과를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18.12.12) ○ 향후, 시금고 은행이 변경되더라도 서울시업무 영역의 서버, 네트워크, 프로그램 설치 등의 추가 부담금 발생은 없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금고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 개혁 부분에 있어서 신한은행은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썼고 이는 서울시의 계획과 맞지 않음, 지역사회 개혁 계획안이 아닌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부담하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해서는 안됨. 지역사회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금고 선정('18.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비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하여 협력사업비 규모가 시금고 선정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 ○ 신한은행이 제안한 지역사회 기여계획(도시 재생,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시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18.9월) ○ 차기 시금고 선정시 지역사회 기여계획이 비중있게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음
<p>○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S-TAX의 만족도 조사를 서울시 엠보팅시스템으로 하는데 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 볼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어플의 사용자는 매우 불만이 많음. 또한 기존 시금고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2018년 4월까지만 답변을 달고 이후 답변이 없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납부 앱(STAX)을 전면 재구축하여 '19.1.1.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사항 : 모든 은행 납부, 지문/패턴/얼굴인식 인증확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설, 모범납세자 증명서 조회 등 ○ 앱 스토어 사용자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개선요구 반영 및 답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7 기준 앱 스토어 사용자 리뷰 평점은 5점 만점에 4.2점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조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작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음. 3일만에 11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사를 정밀하게 하기는 불가능함. 관련 규정을 지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일한 지적이 없기를 바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2항)에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특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예정안건 11개 사업12건(취득11건, 처분1건)중 4건(중앙투자심사2건, 서울시투자심사2건)이 10월 말 사전절차 이행 완료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회의규칙에 따른 제출기한(10월 중순)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향후 의회의 심도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및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기한을 서울시의회와 협의 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계획 대상 사업 모니터링 실시 : '19.1월~(계속)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계획 제출기한 서울시의회와 협의 : '19.10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체납징수와 과오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바람 (38세금징수과,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19.1월) 및 특별정리기간 운영 - 압류재산 공매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 사회저명인사, 고급주택 거주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추진 ○ 과오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세징여건을 감안 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과세 자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 과세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세목별 자체 교육 9회 실시 - 부과전 심의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부실과세 최소화 및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 불복 제기시 시·구간 공동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 - 자치구 시세입 평가 시 「과오납 줄이기」 지표 신설하여 환급 사유의 부정확 입력 및 착오과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지방세 환급사유 적정입력 요령 자치구 안내('19.3.29)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전문가 자문 등 피드백 강화 등 노력 지속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체납차량 합동단속 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자치구·지방경찰청이 연2회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19년에는 체납차량 합동단속 이후에 보도자료 배포하여 자동차세 자진납부 유도하고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였음 - 최근 2년간 서울시·자치구·경찰청 합동단속 실적 (단위: 대, 백만원) <table border="1" data-bbox="588 808 1447 1196"> <thead> <tr> <th>단속일</th> <th>번호판 영치</th> <th>차량 건인</th> <th>징수액</th> <th>단속장소</th> <th>참여기관</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2,946</td> <td>46</td> <td>310</td> <td></td> <td></td> </tr> <tr> <td>'18.05.24.</td> <td>742</td> <td>12</td> <td>61</td> <td>한남대교, 서울 전지역</td> <td>시·구·행안부·경찰청</td> </tr> <tr> <td>'18.06.28</td> <td>762</td> <td>5</td> <td>62</td> <td>서울 전지역</td> <td>시·구·경찰청</td> </tr> <tr> <td>'18.10.30</td> <td>527</td> <td>18</td> <td>63</td> <td>여의도 하단, 서울 전지역</td> <td>시·구·경찰청</td> </tr> <tr> <td>'19.05.22.</td> <td>465</td> <td>5</td> <td>65</td> <td>한남대교, 서울 전지역</td> <td>시·구·행안부·경찰청</td> </tr> <tr> <td>'19.09.24.</td> <td>450</td> <td>6</td> <td>59</td> <td>경부고속도로 서초C 갓길 서울 전지역</td> <td>시·구·경찰청</td> </tr> </tbody> </table>	단속일	번호판 영치	차량 건인	징수액	단속장소	참여기관	합계	2,946	46	310			'18.05.24.	742	12	61	한남대교, 서울 전지역	시·구·행안부·경찰청	'18.06.28	762	5	62	서울 전지역	시·구·경찰청	'18.10.30	527	18	63	여의도 하단, 서울 전지역	시·구·경찰청	'19.05.22.	465	5	65	한남대교, 서울 전지역	시·구·행안부·경찰청	'19.09.24.	450	6	59	경부고속도로 서초C 갓길 서울 전지역	시·구·경찰청
단속일	번호판 영치	차량 건인	징수액	단속장소	참여기관																																						
합계	2,946	46	310																																								
'18.05.24.	742	12	61	한남대교, 서울 전지역	시·구·행안부·경찰청																																						
'18.06.28	762	5	62	서울 전지역	시·구·경찰청																																						
'18.10.30	527	18	63	여의도 하단, 서울 전지역	시·구·경찰청																																						
'19.05.22.	465	5	65	한남대교, 서울 전지역	시·구·행안부·경찰청																																						
'19.09.24.	450	6	59	경부고속도로 서초C 갓길 서울 전지역	시·구·경찰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년간 고액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징수실적은 매년 감소되고 있음. 고액체납자들의 날로 지능화되는 은닉수법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시세 규모는 감소추세이며, 감소의 주요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년도 신규 발생 체납액 2,582억원('17년 2,641억), △59억원 감소 ② 지난년도 징수액 2,003억원('17년 2,094억), 결손처분액 3,838억원('17년 2,580억)이며, △5,841억원 체납액 정리 ○ 체납시세 규모 적정 유지를 위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체납시세 징수목표액(2,216억원),결손목표액(3,000억원) -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담보 등 국세 보다 빠른 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부동산, 자동차 압류·공매, 명단공개·신용정보자료제공·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적극 추진 - 특히, 고급주택 거주,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체납처분면탈행위 조사 및 검찰고발 - 실익없는 장기 압류, 평가액 부족 채권 및 무재산 체납자는 자료 확인 후 결손처분 확행으로 체납 규모를 줄여 나가겠음 ○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 '19. 1월 ○ '19.6월 체납징수 실적은 1,588억원(목표대비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징수액 1,438억원 대비 150억원(10.9%)증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화생활자,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계속) ○ 타기관 공매 미지급금 조사를 통한 채권압류 추진(계속) ○ “은닉재산 제보센터” 지속 운영 ○ 검찰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NICE 등과 정보 공유 및 징수기법 도입으로 은닉재산 추적(계속)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개원 후 연구실적 8년간 연평균 8건. 올해의 경우 연구실적 5건임. 연구요원 확보도 8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구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원이후 연구실적('11~) : 총 594건, 서울시 71건 ○ 연구요원 충원현황 (단위 : 명) <table border="1" data-bbox="612 517 1442 633"> <thead> <tr> <th>년 도</th> <th>'11</th> <th>'12</th> <th>'13</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h>'18</th> <th>'19</th> </tr> </thead> <tbody> <tr> <td>인 원 (누계)</td> <td>4</td> <td>9</td> <td>13</td> <td>12</td> <td>14</td> <td>14</td> <td>16</td> <td>22</td> <td>30</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세제개선 및 시세확충을 위해 시와 자치구의 세제·재정관련 연구과제 적극 발굴 및 의뢰 확대 	년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 원 (누계)	4	9	13	12	14	14	16	22	30
년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 원 (누계)	4	9	13	12	14	14	16	22	30												
<p>○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기준이 2014년1월1일 바뀌었음에도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음. 신고건수도 2016년, 2017년 각각 2건으로 제도가 정체 되어 있음.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재검토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홈페이지에 은닉재산 시민 제보에 대한 정보 수정 완료('18.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기간 : 연중 - 제보자격 :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모두 - 제보혜택 :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3천만원→1억원) - 제보방법 : 유선, 팩스, 메일, 전자신고 - 제보관리 : 은닉재산 제보 전담 TF팀 ○ 체납징수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709백만원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이후 50건 제보되어 709백만원 징수(포상금 55백만원 지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재산 시민 제보 창구 상시 운영 ○ 언론보도 자료 배포 등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의 세무직 비중이 높음. 팀장급 이상은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임용하여 변화가 필요함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p>○ 재무국 직원현황 : 228명(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8명)</p> <table border="1" data-bbox="624 488 1437 672">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행정</th> <th>세무</th> <th>전산</th> <th>기술</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28</td> <td>85</td> <td>72</td> <td>19</td> <td>37</td> <td>15</td> </tr> <tr> <td>4급이상</td> <td>7</td> <td>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5</td> <td>31</td> <td></td> <td></td> <td>4</td> <td></td> </tr> <tr> <td>6급이하</td> <td>186</td> <td>47</td> <td>72</td> <td>19</td> <td>33</td> <td>15</td> </tr> </tbody> </table> <p>○ 재무국은 총 6개부서로 이중 3개부서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 실·국에 비해 세무직 비중이 높은 것은 불가피함</p> <p>○ 다만, 세무직이 승진하면(6급→5급) 직렬이 행정직으로 변경되므로 세무직이 팀장급으로 임용되지는 않음</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팀장급 이상 임용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직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음</p>	구분	계	행정	세무	전산	기술	기타	계	228	85	72	19	37	15	4급이상	7	7					5급	35	31			4		6급이하	186	47	72	19	33	15
구분	계	행정	세무	전산	기술	기타																														
계	228	85	72	19	37	15																														
4급이상	7	7																																		
5급	35	31			4																															
6급이하	186	47	72	19	33	15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38세금징수와 포상금으로 매년 4억원이 쓰이고 있으며, 수납액과 목표액 달성율이 감소했음에도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서울시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부분임 시정해 주기를 바람 (38세금징수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부정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 ○ 최근 3년간 고액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내역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592 656 1444 925"> <thead> <tr> <th>년도</th> <th>체납액</th> <th>징수목표액</th> <th>징수액</th> <th>포상금</th> <th>지급율</th> </tr> </thead> <tbody> <tr> <td>3년 합계</td> <td>25,653</td> <td>1,245</td> <td>1,148</td> <td>12</td> <td>1.05</td> </tr> <tr> <td>2016년</td> <td>9,131</td> <td>415</td> <td>394</td> <td>3.9</td> <td>0.99</td> </tr> <tr> <td>2017년</td> <td>8,584</td> <td>415</td> <td>360</td> <td>4.1</td> <td>1.14</td> </tr> <tr> <td>2018년</td> <td>7,938</td> <td>415</td> <td>394</td> <td>4.0</td> <td>1.02</td> </tr> <tr> <td>2019.8월</td> <td>5,840</td> <td>390</td> <td>277</td> <td>2.3</td> <td>0.8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은 징수액에 따라 연도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지급율은 1.05%로 비슷함 ○ 포상금은 징수액의 체납발생연도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 달성과 별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발생연도 1년차(1%), 2년차(3%), 3년차(5%) ○ '18년말 기준 38세금징수와 포상금 지급 : 39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248백만원(징수액 35,526백만원의 0.7%) - 계약직 151백만원(징수액 3,841백만원의 3.9%)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상정 예정('19.12월) 	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징수액	포상금	지급율	3년 합계	25,653	1,245	1,148	12	1.05	2016년	9,131	415	394	3.9	0.99	2017년	8,584	415	360	4.1	1.14	2018년	7,938	415	394	4.0	1.02	2019.8월	5,840	390	277	2.3	0.82
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징수액	포상금	지급율																																
3년 합계	25,653	1,245	1,148	12	1.05																																
2016년	9,131	415	394	3.9	0.99																																
2017년	8,584	415	360	4.1	1.14																																
2018년	7,938	415	394	4.0	1.02																																
2019.8월	5,840	390	277	2.3	0.82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조직개편의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등의 물품관리 효율화 방안의 성과가 미비함. '아나바다 물품 효율화' 사이트는 담당자가 있으나 2014년 이후 사이트 운영이 안 되어 있음. 재무효율화를 위한 조치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바다물품장터 시스템 개선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장터'게시판 행정포털 내 신설 운영 : '19. 2월~ - 직원대상 물품재활용 시스템 변경 및 활용안내 : '19. 3월
<p>○ 일반재산 수탁기관 선정시 선정위원회 미구성 및 선정 결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음. 재검토 및 추후 방안 보고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상반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재계약 심사시 민간위탁 조례의 재계약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법시행령에 의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후 추가검증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결과 보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동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일 것과,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출연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야함. 현재 모순된 법령운영현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을 통해서라도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의 재단법인으로 등록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에서 등기변경 의뢰('19.1월)한 법률사무소의 법원판단근거서류 요청(주무관청 허가 및 정관 등, '19.2월) - 특수법인인 기타법인은 민법 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등기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상 법인은 민법법인, 그 외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특수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를 부여, 등기됨 ○ 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에 대해 적용되므로 -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연구원에 검토 요청 및 행정안전부에 관련 건의('18.12.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타 시·도와 공동으로 개선방안 지속 강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E-TAX 운영 관련, 일반과세와 중과세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5년이 지난 법인이 증자등기를 할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해야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해서 개선하길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면허세 E-TAX 신고 관련회의 개최(2018.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 5년 후 증자 등록면허세 E-TAX 일반과세 신고 활성화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E-TAX에서 등록면허세 일반과세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협의 ○ 등록면허세 E-TAX 신고 개선 세부내용 검토 후 개선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종류 ‘영리법인 증자/비영리법인 증자/자산재평가 자본금 증자’의 경우 5년 경과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신고양식 변경 - E-TAX 신고시 일반과세로 착오 신고하여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시스템 내 공지 안내 ○ E-TAX 신고 서비스 시행('19. 1. 23.)
<p>○ 공채매입율이 경남은 5%, 서울시는 20% 정도인데 공채매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서울시 세입이 68억원 정도 증대되는데 이에 대한 조례개정 노력이 요구됨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 조례 소관부서(도시교통실 등)와 공채매입율 조정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공채매입을 면제하는 도시철도공채조례 개정안 발의('17.7월, 김용석 의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조례 공채매입율 조정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유지매각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대형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음. 이를 총괄할 통일된 기준으로 조례 제정을 건의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회의 공정성 및 절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가격 평정을 의뢰하고 있음 (확정순번제, '15.9.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지정순서에 의거해 법인을 추천하며 - 감정평가 의뢰의 목적과 재산가액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무소로 이원화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5억원 이하 매입, 매각, 교환 평가 포함) ▶ 사무소 : 기준가격 5억원 이하 재산(매입, 매각, 교환 평가는 제외) - 확정순번제 시행 이후 대형 및 중소형 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도별 의뢰횟수 <table border="1" data-bbox="584 1137 1434 1368"> <thead> <tr> <th></th> <th>대형 법인</th> <th>중소형 법인</th> <th>개인사무소</th> </tr> </thead> <tbody> <tr> <td>2016년</td> <td>14개소 41회</td> <td>38개소 81회</td> <td>13회</td> </tr> <tr> <td>2017년</td> <td>13개소 26회</td> <td>38개소 78회</td> <td>18회</td> </tr> <tr> <td>2018년(11.5.기준)</td> <td>13개소 25회</td> <td>45개소 67회</td> <td>31회</td> </tr> </tbody> </table>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개인사무소	2016년	14개소 41회	38개소 81회	13회	2017년	13개소 26회	38개소 78회	18회	2018년(11.5.기준)	13개소 25회	45개소 67회	31회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개인사무소														
2016년	14개소 41회	38개소 81회	13회														
2017년	13개소 26회	38개소 78회	18회														
2018년(11.5.기준)	13개소 25회	45개소 67회	31회														
<p>○ 공채 매입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 공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채매입에 대한 조례개정 추진 관련 자료 제출('19.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시효결손처분 전 시효중단 노력을 위해 조치한 자료, 가족명의 위장이혼 등 은닉 조사현황 제출할 것
(38세금징수과)

추진상황 : 완료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시효결손 방지를 위한 중단 조치

(단위 : 건)

년도	합계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기타
	1,299,168	83,323	986,542	96,842	132,461
2016년	540,897	32,945	417,387	38,888	51,677
2017년	494,121	30,902	388,407	35,035	39,777
2018.8월	264,150	19,476	180,748	22,919	41,007

- 최근 3년간 위장이혼 은닉재산 조사 내역

(단위 : 명/백만원)

년도	체납자 명수	체납액	징수액
합계	48	2,859	577
2016년	18	413	135
2017년	17	931	432
2018년	13	1,515	10

- 최근 3년간 가족 재산은닉 조사 내역

(단위 : 명/백만원)

년도	체납자 명수	체납액	징수액
합계	17	7,255	715
2016년	5	4,954	153
2017년	8	1,454	456
2018년	4	847	106

향후계획

- 소멸시효 대상자에 대하여 만료 6개월 전 재산조사 후 압류
- 위장이혼 및 가족은닉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유재산관리강화대책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정보와 건축물·토지대장상 정보가 불일치하는 점에 대해 각 부서에 정비를 요청한 문서와 정비 현황을 제출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이후 자료정비 요청 문서 및 정비현황 자료제출 완료('18.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이후 자료정비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 및 결과 제출요청 ('18.1.16) ▶ 2017년 공유재산 결산 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없는지번” 및 처분대기 자료 조치사항 재알림('18.2.8) ▶ 2017년 공유재산 결산 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취득대기재산” 조치사항 재알림('18.2.12) ▶ 공유재산관리대장 미등재 재산 등록 및 취득보고서 제출 요청 ('18.4.20)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취득 및 처분대기 자료 정비 요청 ('18.8.7)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자료 정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없는지번, 소유자·공유지분·면적·지목 불일치) 및 건물(없는지번, 주용도·건물명 불일치) 불일치자료 정비 완료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21%까지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은 15%로 인상하겠다고 함. 최종적으로 확실하고 빠른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국세의 지방이양 등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재원 지방이양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19~'20년):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19년 4%p+'20년 6%p) ▶ 2단계('21~'22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추가 지방세수 확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 - ('19.7. 입법예고)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는 안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마련 추진('19년) ○ 시도협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견서'채택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계획은 미흡, 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등 ○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및 추진전략 정립('19.7. 시·도 재정세제 담당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국세이양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협 재정분권 TF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 : '19.10월~ ○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관계학회 정책 토론회, 학술 세미나 등 공동 주최 등 : '19.11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복수금고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오류 등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처음 시행하는 복수 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수인계('18.5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시금고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 : 총 2회 - 시금고 인수인계 실무협의체 운영 : 총 9회 ○ 시금고 전산시스템 개시 : '19.1.1. 22시 ○ 서울시청금융센터 개점식 : '19.1.9.
<p>○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고 지정 출혈 경쟁에 대하여 평가항목이나 배점 변경 또는 금고기간 연장 완화 등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하고, 시금고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신경써주기 바라며, 시민들이 시금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차기 시금고 선정 : '18.5월 ○ 시금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수인계('18.5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시금고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 : 총 2회 - 시금고 인수인계 실무협의체 운영 : 총 9회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금고 수행실적·보안관리 등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확대 등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4-2018 구세, 시세, 환급이자 과오납 구분자료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최근 3년간 해외연수에 참가한 직원의 직책과 명단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해외연수에 갔었던 분들의 직책과 명단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최근3년간 공유재산 5억이상 20억 미만 매각 현황 (자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시금고 변경 관련 업무추진 중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항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시금고 지정관련 출연금 등에 관한 매뉴얼 작성하여 보고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출연 및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매뉴얼로 하여 시행하고 있음 - 출연금은 현금으로 출연 - 금고약정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 - 재정공시항목에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공시 등
<p>○ 금고지정 시 약정체결 기간 조정사항이 있는 지 검토 후 개정사항을 보고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약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서의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 약정체결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음('19.1월)
<p>○ e-tax 이용 그룹현황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0)